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한여농중앙도입원 교육 강의

지난 6월 24일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개최된 한여농중앙도입원 교육에 참석하여 '협동조합개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여 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업·농촌회생을 위해서는 △농가부채해결 △농가소득보장 △협동조합개혁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여농도 이제 농권보호운동을 할 만큼 성장한 조직이고 최근에는 더욱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어 많은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한여농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캠페인 시상식 개최

하이트맥주와 한농연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24일까지 두 달여 동안 개최되었던 「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취지로 농촌마을의 숙원사업에 각 5천만원씩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당선된 마을은 경기 이천시 부래미마을(녹색체험마을 조성), 강원 양양군 탁장사마을(방재림 및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충북 괴산군 기성마을(마을회관 신축),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새마을(마을 주민용 황토 찜질방 건축), 전북 정읍시 백학마을(경로당 신축), 전남 무안군 석교마을(노인회관 건립),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마을연결 구름다리 건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돌담길 조성사업), 경북 성주군 금수면(홈페이지 전산장비 구축),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민속자료실, 학생 공부방 운영) 등입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30일 관계자와 마을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농연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은 하이트맥주 김명규 상무, 한농연 서정의 중앙회장, 농림부 허인구 인력과장, 심사위원장 김정호 농경연 실장, 한농연 김흥기 수석부회장 등이 10개 마을 대표에게 기념패와 지원금 증서 등을 전

달하였으며, 시상식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식사와 참가자 전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서정의 중앙연합회 회장은 하이트맥주와 같은 민간기업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행사가 많은 민간 기업들에 홍보되어 향후 사회환원 제도화에 의한 기업윤리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맥주 김명규 상무는 “농촌을 살리는데 기업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고향을 생각하고 농촌을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례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거점도시 구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한농연 탁명구 사무총장 ‘농어촌 거점 도시는 농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 이라고 한농연의 입장 밝혀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거점 도시 구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허태열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2~3만명의 농촌거점도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허의원은 “농촌거점 도시는 농촌거점 도시를 통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고령농민과 경제단위 이하 농민의 농지와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탈농을 유도하고, 거점도시에 농업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입주시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집약형 농공단지 를 거점도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탁명구 사무총장은 “농촌은 단지 경제적 지역공동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혈연·문화·생활 공동체로써 농민들의 삶의 공간이자 터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규모화를 위해 농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농민의 정서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탁명구 총장은 “규모화의 경우 칠레는 2000ha 이상 대규모 경영체가 6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농가도 경영규모가 최소 100ha 이상이어서, 평균 농지 1.04ha인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규모화를 통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한다는 것은 국내농업과 국제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탁명구 총장은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농의 탈농을 전제로 한 농공단지 내 산업단지 조성은 상업의 활성화로 오히려 농업의 축소와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상업의 활성화보다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정토론자를 참석한 전여농의 여용옥 사무국장도 “생산원 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토지임대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영농의 규모화로 인한 근본적 생산비 절감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세·고령농의 탈농을 전제로 한 영농규모화는 결국 농업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농연 산하연합회 소식

한농연경기도연합회 - 경인일보 '축산농 위기탈출 모색' 연찬회

지난 6월 10일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경인일보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방안'이란 주제로 축산분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연찬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주요골자는 △지자체의 유기축산물 개발과 생산지원·지역기술협력체 제 구축(최일신 한경대 교수)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육류 공급 및 단골소비 계층 확보(윤자현 도 축산과장) △도축에서 유통까지의 시장유통구조를 투명하고 위생적으로 전환(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희원 경기지회장) △육류 가공의 효율 극대화화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 욕구 충족(고원식 월마트 축산구매 팀장) △소비자들의 고품질육에 대한 제값지불 의지 부족(정종국 도양돈협회 이천시지부장) 등으로, WTO 출범과 국내 축산물가격 하락 등 국내·외 위기상황을 맞아 축산 브랜드 육성과 육가공품 개발 등 품질 고급화를 통한 위기극복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이승엽 차장

한농연강원도연합회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적극적인 농민권리 찾기 나서

지금껏 농기계, 농지, 농작물, 종자 등과 관련하여 대농민 피해 건수는 상당수 발생하였지만,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배추나 감자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그때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농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강원도연합회는 지난 2일 이주영 굿모닝 법률법인 대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향후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통해 농업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석 한농연강원도연합회 회장은 위촉식 자리에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법률 자문이 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 김종식 차장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출범식 개최

지난 6월 27일 경남여성회관에서는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출범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될 학교급식이 예산부족과 위탁급식업체들의 이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들로 인해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공감하는 지역의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에 함께 하는 단체는 한농연경남도연합회를 비롯하여 창원YMCA, 창원YWCA, 경남여성단체연합회, 마산지역학부모운영위협의회, 경남여성회, 민주노동당경남지부, 우리밀경남사업단, 한살림경남, 전국공무원노조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경남연합, 참교육학부모경남지부, 학교급식질향상과조례제정을위한진주시민모임, 창원여성의원전화, 전교조경남지부, 민주노총경남본부, 경남민언련 등 총 18개 단체입니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 강수동 차장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도민 제 2차 대토론회 개최

한농연전남도연합회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월 24일 학교급식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제2차 도민대토론회를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시·홍보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고민과 미비점을 수렴·보완하기 위한 자리로서 농민단체, 학부모(운영위원), 도의원,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예산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동본부의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어 전남도의 학교급식조례(안)은 조만간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농연전남도 및 연대단체 관계자 분들의 많은 노력과 전남도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본부 구성 이후 활동 경과

- 2003.4.24 - 전남도내 20세 이상 주민 45,625명이 연서한 조례제정 청구서 접수
- 2003.4.24~5.1 - 전남도지사 조례제정 청구서 접수 공표
- 2003.5.15 - 조례제정청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 협의를 위한 전남도청 간담회 실시
- 2003.5.19 - 전라남도 심의규칙위원회 수리
- 2003.6.24 -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도민 제2차 대토론회 개최

한농연전남도연합회 박원균 차장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한발 더 다가선 국민건강보험제도

1980년 초부터 지속되어 온 의보통합 논쟁이 지난 7월 1일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이루면서 일단락 되었다. 이로써 20여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국민건강보험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의보통합은 결정적인 순간에 매번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400만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400만 농민이 그토록 열망했던 건강보험 통합 주장의 취지와 투쟁과정을 정리하면서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과 의보통합 역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80년 10월 15일 보사부장관의 건의 하에 '의료보험관리공사'를 설치하면서부터 국민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보사부장관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 단일화 제안을 하였으나, 직장의료보험 연합체와 전경련 등의 반대로 2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대통령(전두환)의 반대로 도입 초기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사부장관은 사회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국회 보사위에서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식적인 표명을 함으로써 국회차원에서 의보통합을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회는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본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주무장관의 반대, 직장가입자의 저항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3단계 통합론이었다. 즉,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재정은 구분계리), 2단계로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여(재정은 구분계리), 마지막 3단계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는 완전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 농민에게 의료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농·어촌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

항을 시행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내용은 농민들의 당초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되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가난한 사람도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이고 사회부조적인 공동체 유지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능력에 맞는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비례보험료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두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농민들의 소득과약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농민들의 농지, 농기계, 식구 수 등을 보험료 수가산정에 반영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였다. 농민의 소득은 생산수단인 농지나 농기계, 화물자동차와 가족의 노동자본 등을 통해 얻게 되는데, 이들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그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중부과의 불합리성이 있었다. 농민들의 의료보험료 보조에 있어서도 국가 부담률이 35.4%에 지나지 않아 타 직종의 종사자들(국가 또는 사용자 부담률 50%)에 비해 10%이상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한마디로 악질적 편법으로 인한 과중부담이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농어민이 이렇게 타 직종에 비해 과도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의료이용 면에서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모순도 있었다. 이는 진료권제도에 의한 것으로 지역 내 또는 인근 시·군 지역까지를 1차 진료지역으로 정하여, 조합의 허가 없이는 1차 진료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껏해야 공중보건의 1명이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이용해야하는 아주 취약한 의료여건을 감안한다면, 의료보험제도는 농어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실시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배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투쟁으로 쟁취한 의보통합

이에, 1989년 '전국 농민 운동 연합'을 중심으로 통합주의 의료 보험 실시를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의료보험 통합은 국회 의결까지 이루어내기도 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되는 좌절을 겪어야 했다. 농어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통합 요구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 1997년 5월 드디어 의료보험개혁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여, 그 해 11월에 여·야의 의료보험



▲ 초기 의보통합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통합반대 주장을 한데 대해 농민단체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11월 18일 마침내 여·야의 제안법안을 조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 입법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1980년부터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10여년 간의 논란은 실질적인 통합보험 실현의 첫 단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통합의 속도는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90%이상 공개적으로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조합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직장조합은 지역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나 농어민에 비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지역조합과 통합된다면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조합 가입자들의 몫까지 떠 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었다. 직장조합 가입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적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사적자유는 어디까지나 공공복리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헌법의 이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지나치게 사적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라는 양대 운영체제를 2003년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20여년간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건강보험제도가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그릇에 어떠한 알찬 내용들을 담아 내는가 하는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국민건강보험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부과방식에 있어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부과의 짐을 덜어주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농지는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수단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감액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중국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직장인을 구분하지 않아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종합소득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이를 근거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 무자료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 추정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부과요소인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평가소득을 소득단일부과 방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그 재원은 농특세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참고 모델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7년간의 의대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5년간 보건지소에서, 8년간 국립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후에 개인병원을 개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제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적 의료 행위는 퇴근 이후(통상 18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

건지소나 종합병원에서 평생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는 우리 농어촌 보건지소 전문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한의대나 의대생들의 공중보건의 지원을 장려하여 이를 대체복무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건강보험 통합 운영을 위한 소모적 논쟁에 20년 이상을 소비해 온 만큼,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이상의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소외 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환영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될 때까지 한농연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전국농민연대, 농협개혁 투쟁으로 농협개혁 난제 해결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7월8일부터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전국 농협 도·시·군지부에 4일여 동안 점거농성과 항의방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협 시·군지부 폐지는 1개시·군에 1개 조합이 있는 곳(전국 약 13개)부터 먼저 폐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해 나가는 것으로 타결되었고, 농협신경분리 문제는 신경분리는 추진하되 기간에 대한 농민연대의 요구안(3년 이내에 분리)과 농협의 요구안(7년 이내에 분리)을 농림부에서 절충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농협개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농협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난제가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해결되어 향후 농협개혁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 인도에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 가톨릭농민회 회장) 및 한농연 서정의 회장 등 소속단체 9개 대표들이 “한-칠레 FTA 비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농민들은 한국 과실산업 및 전체 농업의 총체적 붕괴를 상징하는 시든 포도나무화분에 “근조 식량주권”이라는 문구가 적힌 애도의 검은 띠를 부착하여, 위기에 처한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참여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서정의 한농연 중앙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여농 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전농 의장, 윤금순 전여농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이다. **한농연**